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이상호 의원 외 16인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이상호·강승수·김근한·김민성
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
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정희
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
허민근 의원(17인)

1. 제안이유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및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및 농어민의 책무(안 제3조)

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 대상(안 제4조~제5조)

라. 농어민수당 지급액, 절차 등(안 제6조~제8조)

마. 농어민수당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제10조)

바. 평가(안 제11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6)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나. 부서검토: 농업정책과 의견제출(붙임)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구미시 농어민수당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구미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지급절차,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재정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8. (생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

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④ (생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

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
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농업정책과

조 례 명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div><div>□ 검토 사항</div><div><div>○ 근거 법령</div><div><div>▪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div><div>▪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div><div>▪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div><div>▪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div><div>▪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div><div>▪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div></div></div></div>	
<div><div>□ 주요 사항</div><div><div>○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div><div>○ 시장 및 농어민의 책무(안 제3조)</div><div>○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 대상(안 제4조~제5조)</div><div>○ 농어민수당 지급액, 절차 등(안 제6조~제8조)</div><div>○ 농어민수당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제10조)</div><div>○ 평가(안 제11조)</div></div></div>	
<div><div>□ 검토 결과</div><div><div>○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2022년도부터 시행해온 사업임</div><div>○ 자체재원 보조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div></div></div>	
<div><div>□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div><div><div>○ 기대효과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div><div>○ 소요예산 : 2024년 기편성된 예산</div></div><div><div>※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div><div><div>- 기존 예산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div><div>* 「2023년도 법제업무편람」 p.50 비용추계서 첨부기준 참조</div></div></div></div>	